

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제 6 차 회의(정기) 결과(안)

일시	2017. 7. 17. (월) 19:30 -	장소	협회 사무실
주관	회의간사 김진성	서기	회의간사 김진성
회의장 출석	박종연, 심성보, 김진성, 김진선, 임광섭, 문찬일, 박형호, 이철환, 이준봉		
의견제출		기타 배석	

1. 경과보고

- 새로운 정부,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(6/27)
- 2017 년 여름학습반 시작(6/29~7/20) : 14 명 참가
- 한국문헌정보기술, (주) 디앤디기술 신규 후원회원 가입(6 월)
- *듀플렉스, 매너티 후원회원 탈퇴
- 제 5 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개최(7/7~8)
- 기록관리 정보공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(7/13) ‘국가기록원장 직위의 민간전문직 개방은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다’
- ‘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평가한다’ 토론회 개최(7/13)

2. 주요 이슈 상황 공유 및 논의

- 7/13 ‘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’
- 협회 논평 및 대응방안(협회 기조) 결정
 - > 문재인 정부에서 공표한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?

> 대통령기록물의 범위, 비판의 대상 등
=>머칠 더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

3. 보고·공유 안건 설명 및 논의

(1) 협회 간사 채용계획 경과 및 후속 사항

■ 상근간사 추가 채용 재검토

- 운영위원장 박종연 반상근 (주 1.5 일) 2018 년 1 월까지 / 김진선(주 2.5 일) 18 년

7 월

- 업무분장 및 급여(2017 년 7 월부터 적용)

- 박종연 : 사업총괄(재정 회계 및 사업관리) / 급여 월 60 만원(4 대보험 포함)
- 김진선: 회원관리, 사업지원,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 / 급여 월 100 만원

(4 대보험 포함)

(2) 제 5 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결산

- 총 참가인원 : 143 명

유료 참가자	스텝 및 발표자 등	기록전문직 등	학생
115 명	29 명	90 명	54 명

- 수입지출 현황 (-1,859,430 원)

수입	지출	비고
----	----	----

참가비(사전)	5,880,000	대관료	1,880,000	본행사, 뒷풀이 장소 등
참가비(현장)	430,000	숙소	1,500,000	46 명 기준
후원	2,386,000	식비	3,824,000	뷔페, 맥주 등
		자료집	1,300,000	170 부
		기념품	830,000	150 개
		공연비	200,000	
		다과	114,850	
		소모품	391,580	명찰 및 문구, 우편 등
		상품권	150,000	총 7 명
		교통비	20,000	유류비
		견학	220,000	입장료, 기부금
		회의비	125,000	캠존위 회의
계	8,696,000	계	10,555,430	

- 현장등록 미입금 2 명(10 만원 - 입금예정)
- 전년대비 수입 1,704,000 원 감소(한국문헌정보기술 후원회원 전환)
- 전년대비 지출 1,945,564 원 증가(저녁식사 60 만원, 기념품 20 만원 등)
- 전년대비 참가자 20 명 증가(유료 참가자 19 명 증가)

=> 예산관련 기획, 운영 측면에서 선택지가 많이 없으며 스태프의 공력이 많이 필요함

(현재 참여인원 규모가 애매하게 적은 편임. 유료참가자 200 명 이상, 참가비 수입

1500 만원 이상인 경우 중급 정도의 호텔이나 수련원 사용이 가능하며 기획, 운영

측면에서 선택지가 많아짐)

주제발표 관련

-준비가 부족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어야 함

-도전적인 발표였으며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

-이런 프로그램 기획,운영을 통해서 협회 및 운영위의 긍정적인 주도권을 유지,

발전시켜야 함 : 내용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발전적인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목표하자

-전체 및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발표가 있어야 함

(3) 7.13 국회토론회 -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.정보공개를 평가한다

- 약 80 명 참석

- 별첨 토론요약 참고

(4) 제 9 회 전국기록인대회 준비

-별첨자료 참고(완성본 초안은 곧 공지하겠으며,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.)

- 한국기록학회, 한국기록관리학회, 한국기록전문가협회 3 단체 공동주관

- 3 단체 공동으로 기록인대회를 준비하며, 각 단체의 대표는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음

- 조직위원회는 3 단체 대표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며, 조직위원회는 기록인대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.
- 기록인대회 세부프로그램 확정과 운영을 위해 기획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둔다.
- 기획소위원회 및 실행소위원회는 3 단체의 대표자 외 실무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.

=> 박종연, 심성보, 문찬일 위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획 후 재논의

4. 기타 안건 논의

-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(이철환 공동운영위원장)
 - 기존 운영위원회 체계로 전환 이후 각 담당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기로 함
 - 탄핵국면 이후 각 담당분야별 운영이 아닌 모든 운영의 초점이 현안 대응으로 맞춰짐
 - 캠프 이후 이제 원래 취지대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함
 - 운영위원장, 회장, 운영위원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
 - 모든 사안에 있어 운영위원회 및 간부들의 논의 구조를 다시 설정할 필요
- 2017 년 하반기 협회 주요 진행 사업 검토(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)
 - 심의위원회 개최(후원회원 등 회원가입 승인 검토)
 - 제 9 회 전국기록인대회 준비

- 12 월 KARMA 제 6 호 발행
- 지부 및 분과 설립 활성화 추진
- 회원배가 (협회 홍보용 리플렛 제작)

=> 운영위원장, 회장, 위원별 역할 및 권한(책임) 인식 재공유와 운영위 내부 소통

강화 필요 : 관련하여 신입 운영위원장, 회장, 간사별로 협회 내외부에 인사말 공표

=> 각 담당분야별 현황과 계획 점검 필요 : 다음 회의 전 작성, 공유

=>8 월 제 7 차 회의는 토요일 오후 14~18 시 : 협회 운영 전반 및 각 담당분야별 논의
예정

“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·정보공개를 평가한다” 토론요약

작성일자 : 2017년 7월 13일(목)

토론1 : 박근혜 정부의 정보공개 토론문 - 하승수 / 김유승

세월호 관련 정보공개 청구 - 다 비공개
청와대 예산 정보공개 청구 - 다 비공개
모든 예산집행 내역 정보공개 청구 - 다 비공개
-> 소송중

처음에는 부존재가 아니라 비공개
그러나 참사 당일 구두 보고 기록으로 남지 않음 - 부존재

대면보고, 전화기록 1도 없음

대부분의 기록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옴 -> 핵심정보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왔다

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

대통령 경호실 : 정보목록이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 안 해서 1심 판결에서 정보목록 내놓으라는 판결 -> 2심에서 정보목록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짐 -> 정보목록은 없으나 목록은 있다 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옴

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법이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왜 개선된 느낌이 안 들까 생각함
지자체가 그나마 잘 함
국회, 청와대 정보공개 젤 안 됨 흑흑

김유승 :
지자체 정보공개 90프로 이상

종합토론 : 전진한 이경례 이영남 김유승 곽건홍

곽건홍

전면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약사항에 있긴 하지만 어떤 것들을 제도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.
대통령기록과 기록관리 부분을 하나로 묶어 국가기록원 또는 기록관리의 독립성, 독자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제기 - 새로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

전진한 소장님의 발제문 :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내용 제기된 바 있음

안병우 선생님 : 국가기록원의 조직, 사람, 운영 어떠한 수준에서 개혁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해보길

김유승

정보공개법이 행정행위의 과정에 대한 공개가 되어야한다.

이제까지의 정보공개법은 공기록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

회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공개 안 하고 있음 -> 회의 공개법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

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는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한다.

법령에서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공개가 나왔을 때 이의신청, 행정소송,심판 이런 절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제한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한다.

전진한

서울 - 정보공개 정책과

다른곳 : 비공개된 정보를 심의위원한테 주지 않음 - 서면심의, 대면심의 : 형식적

서울시 : 비공개 당사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킴 - 질의 & 속기록 - 제대로 된 사유 없으면 공개

집권 심의도 마찬가지로

공공기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개입할 수 없다.

서울시처럼 도입해야한다. 정보공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.

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없으면 제대로된 공개 없음

이경례 - 대통령 지정기록에 대해 예외사항을 두는 것

지정물 제도가 지난 10년동안 악용됨 - 이명박, 박근혜

알권리 침해 & 보존 위기

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.

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함

비밀기록 / 지정기록 중첩 문제

국가의 행위가 안보, 안위를 위해 알권리 유예 - 비밀기록 : 시한의 문제일 뿐 언젠가 공개될 예정

비밀과 지정이 중첩되면서 민감한 기록은 이중으로 지정함

이를 개선해야한다.

김유승

지정기록물 :

황교안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 - 국가기록원이 결자해지 해야하는 문제

이영남

지방아카이브 강화

지방아카이브 : 예산 너무 많이 든다 + 조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(시설, 인원 등 확보 어려움)

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

의식에 대한 문제

의식의 괴리가 있지 않나 : 기록행정직으로 일하는 것과 아키비스트 사이의 의식의 괴리가 있다고 봄

관료조직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 - 기록공동체 내에서 의식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

아키비스트 윤리강령 : 윤리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

전진한

지방기록물관리기관 :

서울시 - 서울기록원 공사중

공무원들의 기록을 이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지방 아카이브가 만들어질 명분이 없음

이미 디지털화 중 - 왜 현실 건물이 필요해? 라는 의문 생김

지역의 기록을 만들어 내고 남겨야 한대로 설득해야 함

공무원이 생산한 기록뿐만 아니라 기록에 소외된 사람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그 기록들을 전시할 수 있어야 함

곽건홍

대통령 기록관리법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함

정보기록법과 대통령기록관리법을 아예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,

대통령 기록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 그에 대해 제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

김형국

정보공개에 대한 제안

전문관 제도 반드시 필요 : 정보공개는 일정한 업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 ->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기록관에 속해있어야 한다

정보공개위원회 노, 정보위원회 만들어야 한다 - 정보공개, 개인정보 보호, 공공기록 개방과 보호를 다 다루는 곳 필요

김유승

정보공개 제도 : 운영상 문제, 공무원 의식 문제라는 말에 공감 벋 사람 믿지 않아 흑흑

처벌조항, 회의 공개법 필요하다

우리나라 정보공개법 사실 미국의 정보공개법과 똑같음

우리나라에서는 회의록의 생산 의무만 법에서 강조하고 있음

지금의 정보공개위원회는 유명무실

위원회에 심판기능이 있어야 함 - 행정심판 했을 때 행정심판 재결 나와도 사실 행정기관에서 지키지 않음
상설기관 필요

개인정보와 연계해서 같이 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

곽건홍

정보공개와 관련된 이슈 중 데이터,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같이 생각해봐야함

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약한 부분 : 정보공개, 기록관리(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- 대통령기록
독립성 강화)

지속적으로 기록 공동체가 감시해야할것